

문화수도 쟁점 협의 어떻게 돼가나

## 랜드마크 대체 상징물 합의 가능성

## 주차장 외곽에 2~3곳 설치 합의

문광부와 광주시가 오는 9월 중순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안을 수립한 뒤 연말께 공사 발주를 하고, 빠르면 내년 3월께 착공기로 최근 잠정 합의한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따라 문광부와 광주시, 시민단체들은 각각 공청회와 세미나를 갖는 등 바빠지 지역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문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17일과 22일 각각 서울, 광주에서 갖는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원로와 문화예술·시민단체·시의회·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수도 자문위원회'를 열어 지역 여론을 수렴, 종합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광주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는 공동으로 21일 '아시아문화체널 설립과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세

책임될 가능성이 높다.

◇ 대형 전문공연장=광주시와 광주 예총 등은 오페라와 뮤지컬 등이 가능한 2천석 규모의 전문복합공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광부는 기준 공연장(600석)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향후 전문 용역을 통해 광주종합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 문화전당 부설 주차장 및 7대 문화지구 사업=문광부와 광주시가 사실상 합의에 이른 사안이다. 문화전당으로 인해 발생되는 총 주차수요 증 대상 내에는 필수 주차시설(594 대)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광주여고 부지 등 1~3곳의 외곽(천대)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다. 광주지역을 7대 지구로 나눠 동시에 도심 리모델링을 하기 보다는 전당 주변의 핵심 문화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문화전당 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치 =광주시와 지역 문화계는 세계 각국의 현대

미술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기획전시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민들이 수시로 전당을 찾을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문광부는 전당 내 멀티스페이스 전시공간을 미술관으로 활용토록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설치는 연구용역을 통

## 문화부-광주시 내달중 종합계획안 수립 합의

## 대형 공연장·미술관 분관 설치 등 의견 팽팽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주요 쟁점			
쟁점	광주시	광주 예총	문광부
문화전당 랜드마크	관광상품으로서의 의향적 조성이 보감(동구 비대위 같은 주제)	자신형 대형건축물로의 랜드 마크 보강	설계인 존중, 전당 인접지에 설계인과 별도로 상장을 설치
복합 전문 공연장	오페라, 뮤지컬 등 가능한 전 문공연장 설치	2천석 규모의 대형 전문공연장 건립	기준 공연장 활용 및 향후 문예회관 리모델링 방안 검토
현대미술관 분관 설치	전당내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국제규모의 국립미술관 절실	전당 내 전시공간을 미술관으로 활용, 현대미술관은 별도 검토

미나를 개최, 문화도시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한다.

◇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보완=문광부와 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광부는 당초 설계안을 존중하되, 다만 전당 설계안과 별도로 향후 랜드마크 설치 보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구 주민들과 광주시의회 등은 도심 공동화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시민이므로 반드시 지상형 건축물을 랜드마크를 보완해달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광주시도 전당의 외형 조형미만으로도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랜드마크 기능 보완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전당내부가 아닌 인접지역에 랜드마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상징물을 건립하자는 문광부의 제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안으로

해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문화전당 개관 연기 및 총사업비 변경=문광부는 당초 설계안이 지역 의견수렴 차원에서 일부 수정됐을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 논란 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뎌지는 등 전반적인 사업 지연에 따라 문화전당 개관일을 2010년 5월에서 2012년 5월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0년이 5·18 3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개관 연장에는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가 아닌 공사기간 단축 목적인 요인으로 인해 늦춰지는 경우라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또 문광부는 문화전당 외곽 주차장 확보 등으로 인한 예산 추가를 고려, 당초 7천174억원이 전당 사업비를 8천358억원으로 증액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 문광부는 당초 설계안을 존중하되, 다만 전당 설계안과 별도로 향후 랜드마크 설치 보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 문화전당 개관 연기 및 총사업비 변경=

문광부는 당초 설계안이 지역 의견수렴 차원에서 일부 수정됐을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 논란 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뎌지는 등 전반적인 사업 지연에 따라 문화전당 개관일을 2010년 5월에서 2012년 5월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0년이 5·18 3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개관 연장에는 원칙적으로 반

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가 아닌

공사기간 단축 목적인 요인으로 인해 늦춰지

는 경우라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다. 또 문광부는 문화전당 외곽 주차장 확보

등으로 인한 예산 추가를 고려, 당초 7천174

억원이 전당 사업비를 8천358억원으로 증액

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 문광부는 당초 설계안을 존중하되, 다만 전당 설계안과 별도로 향후 랜드마크 설치 보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 문화전당 개관 연기 및 총사업비 변경=

문광부는 당초 설계안이 지역 의견수렴 차원에서 일부 수정됐을 뿐만 아니라 랜드마크 논란 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뎌지는 등 전반적인 사업 지연에 따라 문화전당 개관일을 2010년 5월에서 2012년 5월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2010년이 5·18 3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개관 연장에는 원칙적으로 반

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이유가 아닌

공사기간 단축 목적인 요인으로 인해 늦춰지

는 경우라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다. 또 문광부는 문화전당 외곽 주차장 확보

등으로 인한 예산 추가를 고려, 당초 7천174

억원이 전당 사업비를 8천358억원으로 증액

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 [ 종합·해설 ]

## 신경전 없이 2시간 못돼 신속 합의

## ■ 남북정상회담 개성 준비접촉 첫 날

## 北 숙박시설 난색 방북단 202명으로

14일 개성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준비접촉은 별다른 진통없이 신속하게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준비접촉에서 남북은 남측 대표단이 경의선 도로를 이용해 방북키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해 직행로를 이용했기 때

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전진된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도로 이용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남측에서는 철도를 통해 방북하

자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서울에서 평양 까지 다섯 시간이나 걸리고, 도로와 달리 철도는 남북간 군사적 보장조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 전용 차량을 갖고 평양에 들어가는 방안은 북측이 먼저 얘기했으며 경호 차량이 동행해 수행한다는 것도 눈에 띈다. 노 대통령은 평양에서 이동하는 내내 이 차량을 이용하며 경호인력들이 이를 이용할 차량도 남측에서 가지고 간다.

의제는 남북 정상간 논의의 유연성 등

을 감안, 지난 5일 남북 합의서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번영, 조국 통일 등으로 3가지로 정해졌다. 남북은 또한, 대표단 규모를 1차 정상회담 때에 비해 20명 더 늘린 202명으로 합의했다.

남측은 대표단 규모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북측은 숙박시설 및 지원인력 한계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더불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회담을 함께 갖기로 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북측이 김 상임위원장이 대외적 국가수반인 점을 감안해 이를 이용할 차량도 남측에서 가지고 간다.

이밖에 선발대 세부 일정과 세부 경호

및 의견 절차, 참관지 문제 등은 추후 계 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준비접촉은 불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1시간 45분만에 대강의 합의 내용을 나누는 등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당초 최소 3~3차례의 준비접촉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으나 오전 1시간, 오후 40분 등 채 2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김민복 국정원장의 두 차례 방북 때 대 부분 핵심 쟁점들이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또한, 북측 단장으로 나온 최승철 통일 전선부 부장이 실세로는 처음으로 회 담 전면에 나서 속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北 집중호우 피해

## 수백명 사망·실종

지난 7일부터 북한 지역을 강타한 집 중호우로 수백명이 사망하거나 행불됐으며 특히 강원도의 인명피해가 심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날 "7일부터 연일 내리는 무더기비(집중호우)로 하여(인해) 많은 인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12일까지 조보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번 무더기비로 수백명이 사망 및 행불불명되고 3만여 동에 6만3천300여 세대(가구)의 살림집이 파괴 및 침수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 중에서도 "강원도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2만여 세대의 살림집이 완전 및 부분 파괴되고 침수되었다"고 소개했다. 북한 언론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각지에서는 집중호우로 수만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매몰·유실됐고 800여 동의 공공건물, 540여 개소의 다리, 70개소의 철길 노반 등이 파괴됐다. /연합뉴스

## 정부 北 수해 지원 검토

정부가 북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서성우 통일부 정보분석본부장은 14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직 북한의 요청은 없지만 북한의 비 피해가 큰만큼 지원 여부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며 "작년 7월 북한 지역 수해보다 인명, 재산 피해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盧대통령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노력"

오는 28~30일 제2차 평양 남북정상 회담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한 껌씩 벗겨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

"남북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남북 간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장

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한

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

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발표했던 지난 8

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문제 ▲군비통

령은 남북경협 확대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확산시켜 북방경 제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날 언급처럼 남북경협의 다각화와

활성화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과 궁극적으로 한반

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지론인 것이다.

그렇다면 일각의 주장처럼 이번 회담

에서 경협을 주의제화 한다는 게 과연 북

측에 경제적인 의미에서 '파주기'를 뜻

할까. 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이미 수차례 걸쳐 밝혀왔지만 노 대통

령은 남북경협 확대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이를 확산시켜 북방경 제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날 언급처럼 남북경협의 다각화와

활성화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과 궁극적으로 한반

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지렛대가 될 수